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3(24-9) | 2024. 9. 2

미래지향적 New 향군문화 정착 방향

김학민

북한 오물풍선 위협

박용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박진호

미래지향적 New 향군문화 정착 방향

김 학 민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선문대학교 교수)

향군의 날과 그 의미

2024년은 10월 8일은 향군 창립 제72주년이 되는 재향군인의 날이다. 재향군인의 날은 “국토방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을 의미한다. 즉, “국토방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증진과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1965년에 지정되었다. 최초로 재향군인의 날은 5월 8일 (1961.5.8, 세계 재향군인연맹 회원국 가입일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지정, World Veterans Federation)이었으나, 어버이날과 중복으로 2002년 6월 9일 대통령령 제17628호에 의거 10월 8일로 변경되었다.

6·25전쟁 시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1951.8.3, United Press: UPI 전신)에서 현재의 10개 사단 외 10개 사단 추가 편성을 강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鄉軍人會) 창설이 국방부에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재향

군인회는 정부 주도하에 창립발기인대회(1951.12.15.)를 거쳐 부산의 동아극장에서 허정(許枉)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역한 장병 3만여 명 참석 하에 창설되었다(1952.2.1, 초대 회장/부회장 준장 백홍석, 예비역 대령 강인로·전봉덕). 당시 재향군인회가 설립된 목적은 전역한 장병은 물론 6·25전쟁으로 전·사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예비역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보호, 복지향상 도모와 군사능력 증진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방부 병무 행정의 집행을 보조하면서 지역별 징병 대상자와 예비역 관리 등 동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재향군인회는 (사)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변경되었고(1953.11.17.), 참전전우회와 통합되어 대한상무회(1957.1.1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바뀌었다(1960.5.14.). 재향군인회는 법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207호, 1963.7.19.)으로서 자주국방 정신에 입각한 총력안보 운동을 위해 각계각층에 대한 안보 강연과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1992년에는 주무 부서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1992.12.) 되었다.

국민의 이미지와 기대감

국민이 인식하는 재향군인은 국가안보 의식이 투철하고, 국가에 헌신적이며 희생을 한 자들로서 평생 피땀 흘린 것에 대한 존중과 존경, 경외심을 갖고 있다. 또한 강직, 청렴, 태극기를 사랑하는 가장 보수적인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 자유민주 가치를 위해서는 타협이 없는 투철한 의식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향군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며 필요성과 당위성, 복지 대책의 확대에 대해 동의하는 원동력이다.

사실 72년이 지난 재향군인회는 6·25전쟁 이후 조국 수호의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위난 시마다 조국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총력안보체제를 강화하고, 사회공익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유우방 향군과의 유대 강화 등 민간외교에도 기여하였다. 즉 향군의 회원들은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신명을 바쳐 조국을 수호해온 역전의 용사들이며, 향토를 지키는 역군들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2015)에 의하면 향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이익단체 36%, 안보단체 25%, 사회봉사 활동 21%, 제대군인 복지증진 12%, 평화유지 기여 6%”인 것으로 나타나서 근본적 설립 목적과 존재의 가치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6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8%, 약간 신뢰한다 7%, 신뢰 한다 1%”로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물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므로 현재와는 매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향군의 발전방향은 “투명성 제고 78%, 공정한 선거 12%, 홍보 강화 5%, 조직개편 및 회원복지 노력 5%”로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향군의 노력이 요구되고 활동의 재정립 등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향군의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즉 급변하는 전략적 환경과 첨단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향군 존립 목적과 정체성을 바로잡으면서,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조직의 정체성을 지양하고, 향군 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무책임한 활동을 근절하며, 창의적이고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자세로 역동성이 강화된 향군문화가 요구된다.

본질적으로 향군 회원들은 군 복무를 통해 안보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젊은 시절 또는 반평생을 국토방위와 민족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젊음을 바쳐 왔으므로 국가 안위에 대한 인식이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강렬하다. 즉 1·21 김신조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민간여객기 및 어선 피납사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8·18 도끼만행사건,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폭파사건, 강릉 잠수한 침투사건 등 수많은 무장공비 또는 간첩 남파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도발을 경험했고 감내했으며, 대비·대응으로 거쳐왔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및 이란과의 전쟁, 북한 김정은의 계속적인 도발과 강경한 수사적 위협, 국내적으로 이념적 갈등의 심화,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 및 안보 전쟁 등 심각한 전략적 환경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재향군인회는 수많은 위협에 대비하고 대응했던 경험을 살려서 국가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가치관을 재설정하여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날로 점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의 인식과 정치권의 안이함, 젊은 세대들의 안보에 대한 무감각 또는 회피하는 상황과 국가와 민족 안위를 저해하는 이념적 갈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바람직한 향군문화 방향

향군은 국가의 가장 보수적인 단체로서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이용 없이 자기 발언이 필요한 단체로서 헌신성과 희생성, 주도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재향군인회는 나라의 안위를 지켜왔으며 통일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월남전에 참가하여 목숨을 바친 전우와 그들의 희생 속에 살아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진정한 대한민국의 영웅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향군인회는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시켜야 하며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새로운 향군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다행히 현 정부는 기존의 정부와 차별화하여 대해주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년 만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셨다(2022.10.6, 제70주년 기념행사, 서울 용산 HYATT호텔). 20년 만의 처음 참석은 재향군인회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청신호이다. 그 기대에 걸 맞는 활동과 행동이 필요하

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하고 절제된 모습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수많은 지회와 분회(시·구·군 및 읍·면·동 지역), 직장 지회, 직장연합 및 분회, 미국의 뉴욕·로스앤젤레스·시카고·하와이를 비롯한 일본·타이완·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브라질·아르헨티나 등 해외지회의 가시적인 활동 또한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궤를 같이 해야 하겠다. 즉, 재향군인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의 권익신장 및 증진, 향토방위 협조 및 지원, 국제 재향군인회와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은 물론,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에서도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현 향군 지도부는 창설 70주년 행사에서 향군비전 2030 선포를 통해 미래 70년의 목표와 추진방향, 48개의 세부 실천과제(① 청렴·신뢰·안정적 재정 기반의 향군, ② 존중받는 향군, ③ 최고·최대 안보단체 그 이상의 향군, ④ 따뜻한 동행, 변화와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향군 건설 등)를 제시하였는데, 거창한 수사적 용어를 지양하고 현 상태를 직시하면서 보다 젊어지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기존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중시하면서 탐욕을 버리고 미래 지향적이고 쇄신적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거의 필요성 재검토와 임명직으로의 변경 검토 등 역량에 비해 비대한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 전문가에 의한 경영성도 필요하다. 또한 제주 43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정체성 정립·발양을 위한 방향성 제시도 요구된다. 8·15광복절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헌신과 희생의 일상화를 통해 통일주역으로서의 능력 배양, 통일주도의 역군으로서의 역량 비축과 발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전문화되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이며 회원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결정된 재향군인의 날(매년 10월 8일)에 대해서 진솔한 토의와 재검토 또한 필요하다. 현재의 기념일은 존경, 존중받아야 할 기념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긍정적 수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변경 의도도 분간하기 어렵다. 기존의 향군의 날이 5월 8일이었으나 어버이날과 겹친다는 이유로 10월 8일로 변경되었는데, 합당한 토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현 재향군인회의 전신인 (사)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의 설립일이 1953년 10월 8일이나, 을미사변(명성황후가 일본인에 의해 무참히 시해당한 날)이 발생한 날(1895.10.8.)이며, 6·25전쟁 시 중공군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날(1950.10.8.)이고, 6·25전쟁 휴전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결정한 날(1951.10.8.)이며, 북한 김정일의 당 총비서로 공식 추대일(1997.10.8.)이기도 하다. 국군의 날과 연계한다면 서울수복의 날(1950.9.28.), 평양점령의 날(1950.10.19.), 재향군인회 창설의 날(1952.2.1.)도 검토가 가능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북한 오물풍선 위협

박 용 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동국대학교 교수)

한반도는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이념적으로 대립해왔다. 1950년 발생한 6·25전쟁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분명하게 규정지으며 군사적 대립관계로 만들었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2000년대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면서 남북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발전시켰다.

북한은 이런 남북관계의 발전 속에서도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군사도발 등을 자행하며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남북은 대화를 통해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남북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오물풍선 사태로 남북관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3천8백여 개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남한에 띄워 보냈다. 특히 7월 24일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지다가 하면, 같은 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민가 옥상에 떨어진 풍선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계된 기폭장치까지 달려 있었다. 이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오물풍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신들의 오물풍선을 남한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응해 취하는 조치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협정위반에 해당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은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지만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강화된 도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 우리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7월 22일부터 재가동되었고, 휴전선 인근에서의 각종 군사훈련도 재개하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완전 단절을 선언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러한 발언 이후 남북관계 완전 단절을 위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가시화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 1월 대남협상 및 대화기구들을 해체한데 이어, 4월에는 남북한 합의를 통해 어렵게 이룩한 남북도로 연결부분을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였고,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되었던 DMZ 내 GP를 다시 원상 복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정부는 금년 7월 말 북한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명의의 인도적 지원을 표명하였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교시를 통해 "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지원받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북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오물풍선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남북 연결통로였던 남북 간 통신 채널이 끊긴지 오래인 데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9·19 군사합의'마저 북한의 합의 위반으로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이 예기치 못한 대남도발행위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우리의 수도권을 위협하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성능시험 사격과 함께, 최근 개발한 무인기 타격 시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금 어려운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에 안보 불안을 부추기며 주변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와 제재를 통해 군비경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즉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되,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동반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의 활동이 요구된다.

남북은 지금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남북은 상호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가 절실해 보인다. 지금이야 말로 북한은 대남 군사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야 할 때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해 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박진호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2017년 9월 6차 핵 실험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핵무력 법제화 공표에 이어, 지난 2024년 8월 4일 북한이 생산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국경 일선부대에 인도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과시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국가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등 올바른 위협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의도를 본고에서 분석했다. 이 같은 행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국민의 여론적 반응을 살펴보고, 국가 안보전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1. 위협의 의미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가 통합된 국가이익을 수호하려면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을 우선 식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협(Threat)과 위험(Danger)을 혼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위협’은 행위 주체가 의도를 갖고 행한 결과에 따라 국가이익에 손상을 초래하는 정치·군사·사회·심리적 문제 등을 뜻한다. 이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정책이 국가안보다. ‘위협’은 어떤 주체의 의도가 작용하지 않고, 기술·공학·자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은 국가재난관리다. 국가이익 중 국가 생존에 관한 사활적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위협과 위험을 다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국가안보전략은 전통적 위협(Threat)에 대비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를 비롯하여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회색지대(Grey-Zone) 전략은 의도를 노출하지 않아 적시적이고 명확한 위협식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2. 위협인식의 중요성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에 대한 전통적 위협은 대부분 적대국의 군사력에서 시작하며, 역사적으로 국가의 국민과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되어왔다. 이런 위협은 통상 상대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함께 존재할 때 실현이 가능하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영국수상 챔벌린이 히틀러와 맺은 뮌헨 평화협정(1938.9.30.)을 들고 귀국하면서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Peace for our time)”를 연설한 후 불과 1년

만인 1939년 9월에 독일 히틀러는 폴란드 침공을 개시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이때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체코의 주데텐란트(Sudetenland) 합병을 허용하는 뮌헨협정 체결을 통해 침략적 의지를 가진 히틀러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 넣었다. 챔벌린 등 유럽국 지도자들이 범한 오류는 적대국인 독일이 갖춘 군사적 능력을 무시하고, 히틀러의 발언에 안주하여 그의 숨겨진 의도를 외면하며, 왜곡된 위협인식에 따라 유화정책을 당시 상황에 부합된 안보 정책으로 선택했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을 제공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이다. 올바른 국가안보전략 수립을 위해 전쟁 의도뿐 아니라 능력도 함께 고려해서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역시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4.27 판문점선언 등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었으나,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투발 능력만 고도화시켰다.

3.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인식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원자탄 개발을 마치고 표준화, 규격화를 선언했다. 2017년 이어지는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사격과 함께 9월 3일에는 수소탄 실험이라면서 이전과 다른 폭발 위력을 갖는 6차 핵 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중국과 같이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추구하여 원자탄과 수소탄을 병행해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원자탄은 2016년 5차 핵 실험을 통해 개발을 마치고 양산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탄은 2017년 6차 핵 실험을 통해 핵심기술을 평가했다. 그런데 2018년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축제를 운운하며 평창 올림픽을 명분 삼아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2017년 말까지 6차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로 9회에 걸친 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한 채, 국제질서를 어지럽힌 위기 상황을 교묘히 모면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기대했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침내 북한은 2023년 3월 31일 그동안 추출한 핵 물질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탄 화산-31 핵 탄두 십여 발을 공개했다.

이런 핵 탄두 투발을 위해 계획한 듯이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 말까지 100회에 다다른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갔다. 2018년 평창 올림픽 기간에 잠시나마 조성되었던 평화 분위기를 깨고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준비된 듯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재개해서 2019년 4월부터 2023년 말까지 113건의 미사일 사격을 감행했다. 마침내 2023년 1월 1일에는 600mm급 초대형 방사포(KN-25) 30문을 증정하는 전력화 행사를 가졌다. 이어 2024년 8월 4일에는 중요군수기업소(방산업체)들에서 생산한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TEL)를 북한 제1선 부대들에 인계식을 공개하면서 핵 탄두 투발 수단인 미사일의 단계적 전력화 진행 과정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성은 첫째, 마치 이스라엘의 아이

언돔(Iron Dome)을 저가 대량의 로켓 동시사격으로 극복한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를 통해 남한에 배치되는 탄도탄 방어체계 동시교전 능력을 극복하여 북한 미사일의 성공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특성이다. 둘째, 다종의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으로 불리지는 소위 활공형 탄도탄을 개발해서 남한에 배치된 탄도탄 방어 체계에 대해 종말 고기동성을 이용해 돌파하는 특성이 있다. 셋째, 플랫폼을 궤도차량, 철도차량, 수중에서 운용하여 생존성 향상을 통한 잔존능력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런 노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잔존능력 향상을 통한 응정보복능력 확보 문제로 핵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전력의 완전성 구비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북한이 전력화를 공개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포함해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걸친 모든 사거리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런 노력은 미군의 한반도 전개 시 미 본토로부터 하와이, 괌, 오키나와, 요코스카 등 유사시 모든 경로를 선택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 항모전단을 타격할 지대함 미사일을 포함한 순항미사일, 핵 어뢰 등 다양한 투발 체계를 개발하여 과시하고 있다. 이런 특이한 핵 투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에 유사시 전개하는 미 증원전력을 거부하여 고립된 남한만을 상대로 핵무기를 이용한 결전 여건 조성 능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핵 능력을 갖춘 북한의 의지를 살펴보면, 북한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이후 핵무력정책법)을 심의 채택하고, 2023년 9월에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는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 수준의 의미를 더 확장하여 ‘핵 무력의 지위와 핵 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 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런 법령을 통해 드러난 북한의 핵 능력에 따른 핵 사용 의지는 핵 무력 정책법에 선제 핵 공격이 명시되었고, 공격 대상에 ‘한반도 남쪽’이 포함되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공격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 서문에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무력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 안정, 근본이익 수호’의 수단이라고 명기하였다. 여기서 ‘영토 안정’은 핵 무력이 한반도 영토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으로, 남한에 대해 북한의 핵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미사일은 북한이 실제 한반도에서 남한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완전히 갖추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생존에 대한 최고의 위협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핵 전략 측면에서 북한이 구축한 핵 무력은 군사적으로 공격능력을 완전히 갖추었고, 그동안 구사해 온 핵 전략은 과시(Swaggering)나 억제(Deterrence)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핵 무력정책법에 포함된 선제적 사용 가능성 조항을 통해 강압(Coercion)을

구사하려는 의도는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을 실전 사용 없이 한미 동맹의 중심이 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한반도 일대 미 전략자산 전개를 거부하는 강압전략 구사를 시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만약 위협인식이 왜곡된다면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모호한 상황 하에 정치적 목적을 단계적으로 성취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4.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방향

여기에 대응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의한 확고한 확장억제체제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국가안보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합참 핵·WMD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제반 군사적 능력을 합동·연합 차원에서 통합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대응 능력을 갖추어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즈음하여 핵 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 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한민국 핵 잠재력 확보 등의 대안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 더구나 북·중·러 연대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이란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상황은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의 능력을 포화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했다. 사용 후 피해지역을 관찰한 보고서엔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미국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간절히 담아 두었다. 이 정신이 현재의 미국 핵 비확산 정책에 반영되어 국가안보정책 기반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런 핵 비확산 정책을 위한 NPT 같은 국제 레짐들이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북한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대안을 배제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에 국가 차원의 극단적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 우리에게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 핵 위협이 점점 고조되어 북한의 강압전략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국가 생존을 위한 핵 무장 정책 선택이 불가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민한 적응성을 갖추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국가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외부 위협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회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위협인식 왜곡에 따른 국론분열의 취약성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전략 구현의 기민성을 갖추려면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한 가운데 모든 전략적 대안에 대한 선택이 가능토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